

기본급 184,900원 인상!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
회사의 노동안전보건 의무 확립! 성폭력 예방 및 금지!



지부교섭 속보

2호

2023.05.12(금)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박중우 ■주소: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5차 지부교섭_질의응답② 기후위기 대응]

기후위기 대응은 생존의 문제!

기후위기 대응 요구 질의응답 진행

5월 11일(목) 대한이연에서 5차 지부교섭이 열렸다. 두 번째 질의응답 시간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회사 교섭위원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등 관련 정보가 어떤 정보를 말하는지, 기후위기 관련 교육은 어떤 내용인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여력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등을 물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첫 걸음!

기후위기 문제는 전 지구적인 문제로 노사 관계를 떠나 심각한 생존의 문제다. 그러나 각 사업장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만한 역량이 없는 상황이다. 올해 지부 요구안은 그런 논의를 시작하는 첫 걸음이다.

우리 회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인하고 줄여나가기 위한 계획을 노사가 머리 맞대고 고민하자는 요구이다. 지부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가능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노사간 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자고 설명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고용,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에 변화가 생기면 보충교섭을 통해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중앙교섭 핑계대지 말자!

이날 회사 교섭위원들은 중앙교섭도 진행이 미진하니 질의응답을 한차례 더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충분한 논의를 위해 질의응답을 더 진행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중앙교섭 핑계는 대지 말아야 한다. 중앙교섭 합의내용에도 못미치는 제시안만 제출하면서 필요할 때만 중앙교섭 핑계대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5/11(목) 교섭위원 공동실천 활동> 한국타이어 총고용 보장 촉구 집회



5차 교섭 속기록

한온은 지역 노사관계 흔들지 마라!

노 :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정부가 한 것은 노조탄압이었다. 어제 단위노조 대표자들이 모여서 윤석열 퇴진투쟁 선포식 가졌다. 노동자 투쟁이 시작된 것을 알리는 것이다.

한온 교섭상황을 보면 노사관계가 매우 안 좋다. 다른 지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우려되는데 이런 일 있으면 안된다.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 방안 찾아야 한다. 한온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앙교섭 제시안이 제출되지 않았으니 지부교섭 질의응답 한번 더 하자고 제안한 것은 중앙교섭 합의안 나오면 수용하겠다는 건가? 지역에서 논의할 수 있는 건 해야 한다. 작년, 재작년은 중앙교섭 합의안에 못미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중앙교섭 핑계 댈거면 합의내용 그대로 수용할 생각인건지? 종합적으로 판단해라.

사 :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겠다는 게 입장이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등 관련 정보가 뭔지 애매모호하다.

노 : 기후위기 대응의 요구는 노사 모두 구체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관련 정보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확인하자는 것이고 그 외 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협의과정에서 확인 가능할 것이다. 어떤 사업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지 조차도 모를 수 있다. 한걸음씩 시작해보자는 의미다.

사 : 회사 규모에 따라 그럴 실정이 안되는 부분은 감안해달라.

노 : 감안해서 온실가스 배출량만 명시한 것이고 기타 정보는 회사 상황에 맞춰 어떻게 논의할지는 협의체에서 논의하면 될 것 같다.

사 : 조합이 주관하는 매년 2시간 기후위기 교육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

노 : 교육프로그램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준비 중이다. 이후에 내용 협의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기후위기 심각성, 원인, 대응 등 순차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사 : 단협 유효기간 중이라도 다시 노동조건 결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단협 내용을 부인할 수 있다는 건지?

노 : 노조가 단협 부인할 이유가 전혀 없다. 유효기간 중이라도 급격한 변화가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 현실화되면 보충교섭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사 : 각 사별 상황이나 여력이 다르다. 법적인 의무사항 감축량을 달성해도 매년 투자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인가?

노 : 비용, 시간, 인력 등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규모 작은 회사가 큰 기업과 같이 적용하려면 어렵다는 것은 지회장들도 다 알고 있다. 회사에 맞게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

사 : 개별 사업장별로 협의체 구성하는 건가?

노 : 사업장별로 구성한다. 기존 협의체가 있다면 의제를 추가해서 논의할 수도 있다.